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207호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고양시 규칙 제1208호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4
고양시 규칙 제1209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5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5-81호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30
---------------------	--	----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5-739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대장~홍대 광역철도 108정거장 [덕은역])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32
----------------------	---	----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3월 18일

고양시 규칙 제1207호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전단 중 “3분의 1을” 을 “3분의 2를” 로 한다.

제18조제8항 중 “위해” 를 “위하여” 로 한다.

별표 1의 시장, 시의회 의장의 신규차량 교체기준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을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표 대형승합차의 신규차량 교체기준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경과” 를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 구입 중이거나 교체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배정

또는 교체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재산관리과
입 안 자	과 성 명	재산관리과장 한 민 수
	팀 성 명	차량관리팀장 박 동 각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진 원 031-8075-2548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전용차량의 신규차량 교체 기준을 변경하고 사고로 인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수리비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고로 인한 신규차량 교체 시 적용되는 수리비 기준을 강화함(제7조 제3항제1호).
- 나. 전용차량의 신규차량 교체기준을 개정함(별표 1).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3월 18일

고양시 규칙 제1208호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해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

른 범칙사건조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현장확인”이란 세무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과세대장의 작성·관리, 과세자료 처리 및 세원관리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따르지 않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추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과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장부 기록 확인 업무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따르지 않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세무조사 유예”란 일정기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선정된 경우 그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과 다른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책임자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시장은 고양시를 납세지로 하는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구분)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세무조사: 특정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

증하기 위해 정기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2. 특별세무조사: 일반세무조사와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3. 긴급세무조사: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7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사업장·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9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

제10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자
2. 「경기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취득가액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과세물건별 취득가액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유예 기간 내에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과세물건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일반세무조사 대상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중복조사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 다

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연간 계획의 일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방식) ① 시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방식을 결정한다. 이 경우 조사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접조사: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2. 서면조사: 직접조사에 따르지 않고 납세자로부터 장부,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를 하지 않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범위)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기간 중에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목의 특성, 조세채권의 확보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기간) ①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다.

③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명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① 시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연기 사유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제4장 세무조사 진행

제19조(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및 낭독, 권리구제 절차 설명 등을 한 이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 제21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아야 한다.
-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나 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한다.
-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않거나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23조(세무조사 실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및 증명서류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나 관계 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장소)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서관청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시간)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미리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범위 확대 통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7조(해명 요구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해 조사대상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에게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28조(거래상대방의 조사 등) 시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 거래처 또는 관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29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30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명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해 기피·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31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해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 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세정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세정과장 강 복 선
	팀 장 성 명	세무조사팀장 정 연 규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태 길 (031-8075-2248)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4조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해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데에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식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서는 안 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미리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해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안 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해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 투어서는 안 된다.
-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해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해야 한다.
-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

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사업장)			
수령장소	※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작성		

귀 고양시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받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
2. 납세자권리헌장

년 월 일

서 약 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청렴서약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사업장)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부터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세정상 각종 혜택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고양시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서 약 인 세무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우리 조사공무원은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고양시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			

위임장

대 리 인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격	
	주소(사업장)			

연번	소속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자격

※ 별지 작성 가능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고양시에서 . . . 부터 . . .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자격증 사본

고 양 시 장 귀하

※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양 시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구 분	당 초	범 위 확 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그 밖의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 담당관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 양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사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을 전부 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용어의 뜻을 정비함(제2조).
- 나.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에 상위 법령 및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함(제10조).
- 다. 세무조사 유예 기준 및 대상을 변경함(제11조).
- 라. 조사대상에 따른 세무조사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함(제14조).
- 마.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절차를 신설함(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3월 18일

고양시 규칙 제1209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 급수”를 “수도급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 중 ““소장”으로”를 ““소장”이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부대상”을 “발급 대상”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31조에 따른 독촉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1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정수예고한 후 정수처분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최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고 내용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발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수도행정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수도행정과장 이 용 수
	팀장 성명	일산요금팀장 이 미 란
	담당자 성명·전화	노 성 진 031-8075-4461

[별지 제27호서식]

과오납금 환부 지급(충당) 통지서

관리자	주 소		고양시 구 동 번지 호 (통 반)						
	성 명		수도전번호						
과 오 납 액	납 기		과 목	정 당 납부액	기납부액	과오납액	과오납 연월일	환부이자	
	년	월						일수	금액
	① 과오납합계액			원		①-②충당후잔액 (환 부 액)		원	
충 당 내 역	납 기		사용료	정액요금	기 타	가산금	계	과오납된 사유	
	년	월							
	② 충당금액			원		충납 후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인)									

※ 공지사항

- 1.첨부서류: 환부권리자 신분증(법인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이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통장
- 2.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양도신청서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관리자	주 소		고양시 구 동 번지 호 (통 반)				
	성 명		수용가번호				
환부 방법	계좌송금		(은행)				
			(계좌번호)				
과 목	납 기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과오납연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확인
(인)

년 월 일
 청구자 (인)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과 목	납 기	과오납금	환부이자	영수금액	생년월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별지 제29호서식]

과오납금 양도신청서

양도인	주소				
	성명			연락처	
양수인	주소				
	성명			연락처	
과 목	납기	과오납금액	과오납연월일	양도하려는 금액	비 고

본인이 과오납금을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양도인 신분증(법인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이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 통장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방식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고 내용 통지 방식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에 따라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예고 내용 통지 방식을 규정함(제32조제2항).
- 나. 과오납 반환금 대리 수령 및 양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4-393호(2024. 10. 29.)로 고시된 덕양구 주교동 559-1번지 일원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중 정비사업비 변경 오기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 3. 18.

고양시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나. 명 칭 :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59-1번지 일원
- 나. 면 적 : 120,385.8㎡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가. 명 칭 : 원당1구역 조합(조합장 정종근, ☎031-968-2125)
-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3번길 60(주교동)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4. 10. 29.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
공동주택	분양	74,957.4042	17	지하3층, 지상26층~35층	2,335	325,209.6219
	임대	5,847.5985			266	25,278.6415
상가		509.9490	2	지상2층		1,424.8575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 대상	공동주택 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 공급	비 고
	계	39㎡	46㎡	59㎡	74㎡	84㎡		
계	2,601	264	140	1,443	358	396	28	
조 합 원	1,689	3	32	901	357	396	13	
보류시설	10			10				
일반분양	636	52	108	475	1		15	
임 대	266	209		57				

라.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변경없음)

마. 주요 변경사항(정정)

- 정비사업비 등의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총수입	873,484,414,000	1,209,204,383,105
총사업비	697,867,912,858	1,033,607,104,475
종전자산기준 총가액	175,300,959,415	175,300,959,415
추정 비례율	100.18%	100.169%

※ 정정사유 :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따른 정비사업비 오기 정정

바.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 철거완료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031-968-2125) 또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44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대장 ~ 홍대 광역철도 108정거장[덕은역])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1. 고양 도시관리계획(대장~홍대 광역철도 108정거장[덕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18일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266,413,923.0	-	266,413,923.0	100.00	
도 시 지 역		195,000,955.0	-	195,000,955.0	73.19	
주거 지역	소 계	43,266,956.0	증) 1,567.5	43,268,523.5	16.24	
	전 용 주 거 지 역	572,361.0	-	572,361.0	0.21	
	제1종전용주거지역	572,361.0	-	572,361.0	0.2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일 반 주 거 지 역	38,262,430.0	-	38,262,430.0	14.36	
	제1종일반주거지역	12,126,466.0	-	12,126,466.0	4.55	
	제2종일반주거지역	13,406,455.0	-	13,406,455.0	5.03	
	제3종일반주거지역	12,729,509.0	-	12,729,509.0	4.78	
	준 주 거 지 역	4,432,165.0	증) 1,567.5	4,433,732.5	1.66	
	상업 지역	6,967,406.0	-	6,967,406.0	2.62	
상업 지역	중 심 상 업 지 역	992,818.0	-	992,818.0	0.37	
	일 반 상 업 지 역	5,867,705.0	-	5,867,705.0	2.20	
	근 린 상 업 지 역	106,883.0	-	106,883.0	0.04	
	소 계	100,000.0	-	100,000.0	0.04	
공업 지역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	-	-	-	
	준 공 업 지 역	100,000.0	-	100,000.0	0.04	
	소 계	144,666,594.0	감) 1,567.5	144,665,026.5	54.30	
녹지 지역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144,666,594.0	감) 1,567.5	144,665,026.5	54.30	
	소 계	41,997,813.0	-	41,997,813.0	15.76	
관리지역	보 전 관 리 지 역	18,738,709.0	-	18,738,709.0	7.03	
	생 산 관 리 지 역	2,750,057.0	-	2,750,057.0	1.03	
	계 획 관 리 지 역	20,509,047.0	-	20,509,047.0	7.70	
	소 계	29,415,155.0	-	29,415,155.0	11.04	
농 립 지 역		29,415,155.0	-	29,415,155.0	11.04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덕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646,623.3	-	646,623.3	100.0	-
주거지역	소계	378,274.6	증)1,567.5	379,842.1	58.7	-
	전용주거지역	6,466.2	-	6,466.2	1.0	-
	제1종전용주거지역	6,466.2	-	6,466.2	1.0	-
	일반주거지역	367,928.7	-	367,928.7	56.8	-
	제1종일반주거지역	36,210.9	-	36,210.9	5.6	-
	제2종일반주거지역	331,717.8	-	331,717.8	51.2	-
	준주거지역	3,879.7	증)1,567.5	5,446.9	0.8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1,956.5	-	151,956.5	23.5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6,392.2	△1,567.5	114,824.7	17.8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m ²)	변 경 내 용
	기 정	변 경		
덕은동 721	자연녹지 지역	준주거 지역	1,567.5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덕은지구 내) 대장 ~ 홍대선 광역철도 108정거장[덕은역]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m ²)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 설	철도	일반 철도	덕은동 721	덕은동 721	108 정거장	-	1,567.5	-	721공(1,567.5m ²)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철 도	- 신설 - 면적=1,567.5m²	대장 ~ 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녹지	경관녹지	덕은동 721	3,579.1	감)1,567.5	2,0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3호 ('15.12.31.)	- 중복결정 - 철도 - 나:418m²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녹지	철도시설 저축 면적 변경 및 중복결정	대장 ~ 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철도시설(108정거장) 신설로 인한 면적 변경 및 중복 결정

□ 지구단위계획(덕은지구)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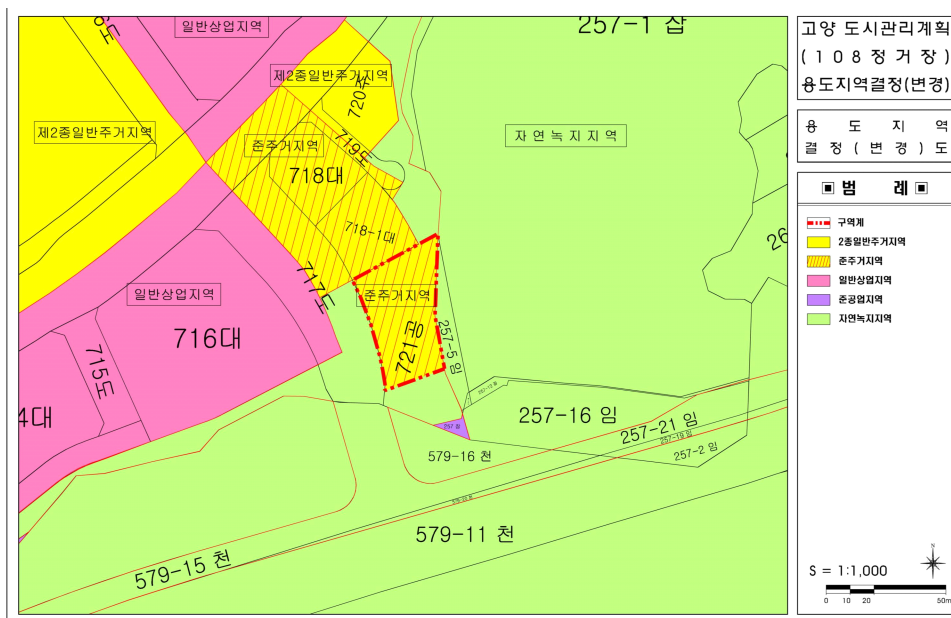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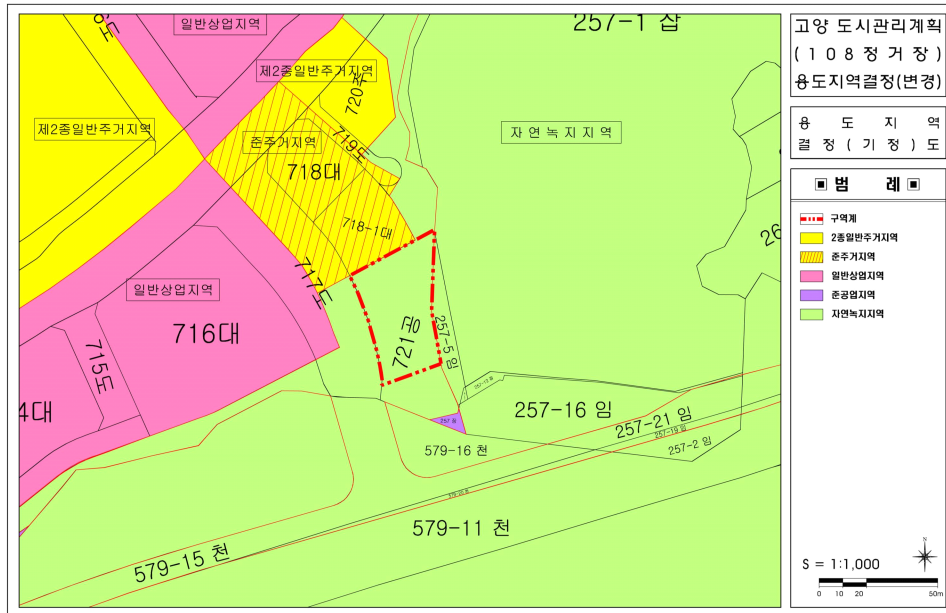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의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646,623.3	-	646,623.3	100.0	-
주거지역	소계	378,274.6	증) 1,567.5	379,842.1	58.7	-
	전용주거지역	6,466.2	-	6,466.2	1.0	-
	제1종전용주거지역	6,466.2	-	6,466.2	1.0	-
	일반주거지역	367,928.7	-	367,928.7	56.8	-
	제1종일반주거지역	36,210.9	-	36,210.9	5.6	-
	제2종일반주거지역	331,717.8	-	331,717.8	51.2	-
	준주거지역	3,879.7	증) 1,567.5	5,447.2	0.9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1,956.5	-	151,956.5	23.5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6,392.2	감) 1,567.5	114,824.7	17.8	-

나.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의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도 : 첨부(변경)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철도(신설)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철도	일반 철도	덕은동 721	덕은동 721	108 정거장	-	1,567.5	-	721공(1,567.5m ²)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철도	- 신설 - 면적=1,567.5㎡	대장 ~ 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신설

2) 공간시설(변경)

가) 녹지(변경)

- 완충녹지(변경없음)
- 경관녹지(변경)

- 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m ²)		단계별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기정	변경		
합계			11개소	34,513.1	32,851.3	30,628.1	29,060.6	3,885.0	△ 1,567.5
경관 녹지	1	기정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74-2 일원	6,621.6	6,621.6	6,621.6	6,621.6	-	
	2	변경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721	3,579.1	2,011.6	3,579.1	2,011.6	-	△ 1,567.5
	3	기정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708	4,643.3	4,643.3	4,643.3	4,643.3	-	
	4	기정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19-47 일원	947.2	947.2	947.2	947.2	-	
	5	기정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32-22 일원	77.5	77.5	77.5	77.5	-	
	6	기정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94-5 일원	1,548.7	1,548.7	1,548.7	1,548.7	-	
	7	기정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84-8 일원	8,459.2	8,459.2	7,255.8	7,255.8	1,203.4	
	8	기정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26-1 일원	3,006.4	3,006.4	324.8	324.8	2,681.6	
	9	기정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31-3 일원	806.8	806.8	806.8	806.8	-	
	10	기정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산98-16 일원	3,991.1	3,991.1	3,991.1	3,991.1	-	
	11	기정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44 일원	832.2	832.2	832.2	832.2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경관녹지	덕은동 721	3,579.1	감)1,567.5	2,0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3호 ('15.12.31.)	- 중복결정 - 철도 - 나:418㎡

- 경관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녹지	철도시설 저축 면적 변경 및 중복결정	대장 ~ 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철도시설(108정거장) 신설로 인한 면적 변경 및 중복 결정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철도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적(m²)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²)	
합 계						1,567.5	-
신설	-	철도1	1,567.5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721	1,567.5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

1) 철도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철1	용도	허용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철도 제8호 운수시설(철도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철도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380% 이하
		최고높이	62m 이하
		해당블럭	철도1
		배 치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조(건축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7조(건축물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다. 대지 내 공지 및 동선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 기타사항

1.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3. 18.(화) ~ 2025. 4. 1.(화)]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계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기타사항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덕양도시관리팀(☎031-8075-3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